

금융투자업규정
조문별 제 · 개정이유서

2022. 7.

금 융 위 원 회

1. 재간접 펀드의 채권형 ETF 100% 편입 허용 [안 제4-52조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현재는 요건을 갖춘 주식형 ETF의 경우에만 재간접 펀드의 100% 투자를 허용

* 규정 제4-52조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채권형 ETF가 일정 요건*을 갖추 경우 재간접 펀드의 채권형 ETF 100% 편입 허용

* ETF목표 지수 구성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, 지수 구성 개별 종목이 20%미만일 것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채권형 ETF와 주식형 ETF 재간접 펀드의 차이 해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. 성과보수 펀드 및 고유재산 투자 펀드의 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 연장 및 수시공시 완화(제4-54조의2 및 제4-67조의2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현행 규정(법 제81조제3항)상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등으로 투자한도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투자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(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)은 3개월
 - 또한 펀드 설정 및 설립 후 1년이 지난 후 펀드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펀드(소규모 펀드)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사실을 수시 공시할 의무가 있음
-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성과보수 펀드(공모펀드)와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펀드(시딩투자)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성과보수 펀드(공모펀드)와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펀드(시딩투자)에 대해서는 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, 소규모 펀드 판단시기를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인센티브 부여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보수 펀드 설정 및 펀드에 대한 고유재산 투자(시딩투자) 유인 발생으로 관련 펀드 설정 활성화 전망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3. 인덱스 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종목 투자 규제 완화[제4-57조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집합투자업자는 지수 변동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(인덱스 펀드)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, 지수 내 해당 회사의 비중까지 취득 가능
- 이때, 하나의 종목의 지수 내 비중 제한(30% 미만)*으로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클 경우 주식 취득의 제한이 있었음
- * 그 밖에 지수 구성종목 10개 이상, 지수 구성종목 시가총액 순 85% 종목은 시총 150억원 이상, 거래대금 1억원 이상일 것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특정 지수의 경우, 지수 구성 종목 중 하나의 종목이 30%를 초과하더라도 지수 내 비중만큼 계열사 주식 취득이 가능
- *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인덱스 펀드의 지수 변동에 충실한 펀드 운용이 가능해짐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4.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 도입[제4-65조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공모펀드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공모펀드의 운용성과에 연동하는 보수(성과보수)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,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기존 성과보수 수취 방식(별도 성과보수 방식)과 함께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을 도입

나. 제·개정 내용

- (성과연동형 운용보수) 펀드 성과가 (-)라고 하더라도 기준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경우 성과에 연동한 운용보수 수취가능
 - *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 : 운용보수가 기본보수+추가성과보수로 구성되며, 절대수익률이 (-)이더라도 추가성과보수는 (+)로 반영 가능
 - ①펀드성과>기준지표 : 펀드수익률이 (-)이더라도, (+)추가성과보수 가능
 - ②기준지표>펀드성과 : 펀드수익률이 (+)이더라도, (-)추가성과보수 가능
-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의 경우, 운용보수가 기본보수+추가 성과보수로 구성
- 운용성과와 기준지표간의 차이와 대칭적인 구조의 성과운용보수 산정 방식을 마련
- 기본운용보수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보수를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보수의 90% 이하가 되도록 하거나, 합리적 가정 하에 성과운용보수를 계산한 값이 기본운용보수의 $\pm 20\%$ 밖의 범위에 분포하는 등 적정한 값으로 결정되도록 정할 것
- 협회는 필요한 경우 성과보수 산정 등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새로운 형태의 성과보수가 도입됨에 따라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채택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5. 로보어드바이저의 규제 완화[제4-77조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광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대면 방식의 설명을 허용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투자 광고에 투자일임 계좌의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 (불건전영업행위*) 하고 있으나 투자일임과 관련하여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수익률을 기준일자와 함께 제시하는 행위가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

* (불건전영업행위 취지) 일임은 고객별 개별적 운용 특성상 포트폴리오 구성 및 수익률이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, 특정한 일임계좌의 수익률이나 평균 수익률 제시는 마치 예상수익률로 오인될 수 있어 불건전영업행위로 제한

- 또한 투자일임계약시 대면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이상 기존 성과를 통한 검증이 가능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서는 비대면 방식의 설명도 가능

* 다만, 일임계약의 운용성과 및 위험지표 등 주요사항을 코스콤 홈페이지에 알리고 관련 링크를 제공할 것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 제시를 통한 수익률 및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되고 수익률 경쟁도 유도되는 한편, 설명의무 규제 완화로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도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6.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(제7-1조의2 및 4-63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를 법규화하고 기존 행정 지도는 폐지하려 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공모펀드 등록시 운용사가 2억원 이상의 자기재산을 투자하도록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어('17년 이후) 이를 규정화
 - 다만 펀드가 등록되기 전에는 자기재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, 우선 자기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등록시 제출하도록 규정
 - 펀드는 등록 후 즉시 사전 투자계획에 따른 자기재산 투자이행
- 자기재산 투자의 방법 및 자기재산 투자 없이 등록할 수 있는 공모펀드(성과보수 수취 펀드, MMF 등)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
 - 고유재산 투자금은 펀드별 2억원 이상으로 최초 출자 및 납입일에 전부 또는 분할 납부 가능하고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3년 이상 유지하도록 함
- 자기재산 투자계획을 제출한 뒤,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행정지도를 법규에 반영하여 명시적 규제로 전환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없음

7.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(제7-1조의3, 제7-4조 및 제7-8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
규준을 법규화하고 기존 행정지도는 폐지하려 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소규모 펀드 비율의 계산방법과 소규모 펀드 비율 5%를 초과
하여도 공모펀드를 등록할 수 있는 예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
- 소규모 펀드 비율에 관한 서류를 등록시 제출하도록 집합투자
기구의 등록신청 첨부서류로 추가
-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원본액이 15억원
미만으로 극히 적어지는 경우 다른 펀드로 전환되는 것을 예정하고
이를 투자규약에 반영하도록 규정
 - * 시행령상 집합투자기구의 전환이 규약상 예정된 펀드는 수익자총회를 거치지
않고 펀드의 전환이 가능
 - 또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 없이 투자
신탁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데, 이를 사전에 투자규약에 반영하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행정지도를 법규에 반영하여 명시적 규제로 전환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8. 수익자 총회 결의사항의 규제 완화[제7-8조의3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수익자총회를 거쳐야만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어, 장기 비활동성 펀드의 개편 및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장기 비활동성 펀드* 및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는 투자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이사회 의결로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

* 설정 10년이 경과하고 3년간 일평균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한 경우

- 이 때 이사회 의결 2개월 전에 서면 통지 등 투자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% 이상의 반대의사 표명자가 없어야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비활동성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이 원활히 가능하도록 하고, 일정 수탁고가 모이면 부동산펀드로 전환하는 펀드 등 다양한 공모펀드 상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9.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(제7-16조, 제7-16조의2, 제7-17조, 제7-19조 및 제7-36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원화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화 MMF가 도입됨에 따라 외화 MMF에 편입할 수 있는 단기금융자산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외화MMF가 편입할 수 있는 외화 단기금융자산 열거
 -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
 -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,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외화표시 채무증권
 -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외화표시 어음
 - 단기 외화대출
 -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외화예금 등
- 그 밖에 외화MMF의 운용 규제에 관하여 규정하고, 이 때 편입 가능한 채무증권의 신용등급, 운용규제 등은 원화 MMF에 대한 규제와 동일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국민에게 새로운 단기 외화자산 투자상품을 제공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없음

10.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추가발행 사유 추가[제7-21조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환매금지형 펀드는 원칙적으로 증권에의 추가발행이 제한되나,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자에게 보유비율에 따른 추가발행의 우선매수기회를 부여하고 추가발행하는 것은 가능
- 그런데 우선매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매수되지 않아 실권된 증권에 대한 처리방법이 규정되지 않았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집합투자업자는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매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실권된 펀드에 한해 기존 투자자 외 다른 투자자에게도 매수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추가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존 투자자가 매수 하지 않은 실권된 펀드에 대한 처리방안이 명확해짐에 따라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해서도 필요시 추가발행 원활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11. 혼합형 ETF의 편입자산 규제 완화[제7-26조]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주식형 또는 채권형 ETF의 경우 지수 구성종목이 최저 10종목으로 구성 가능하나 혼합형 ETF의 경우 주식 및 채권 각각 10종목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규제 완화 필요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혼합형 ETF의 지수 구성종목을 10종목 이상으로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혼합형ETF와 증권형 또는 채권형 ETF간 차이 해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12. 금융기관인 업무집행사원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 구체화 [제7-41조의14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정책금융기관의 경영참여목적 투자 외의 방식을 통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 운용방식을 정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정책금융기관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재산 전체를 경영참여목적 외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펀드를 타 사모펀드 또는 벤처·신기조합에 대한 재간접 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활성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13.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의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 확대시 관련 절차 규정[제7-58조]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국내투자자의 전원 동의 절차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규정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전환신청서에 국내투자자 전원 동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특이사항 없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